

그래서 ‘구찌’는
얼마여야 하나요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



2022년 10월8일 서울 송파구 A회장 자택 지하주차장 사진. A회장의 공식 관용차인 G90 롤스레이스(‘98XX’)가 주차돼 있다. 반면 A회장의 또 다른 회사차인 ‘88XX’는 주차장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구찌가 좀 걸리는데...”

굳이 어원을 찾아보지 않아도 뉘앙스만으로 의미가 짐작이 갔다. ‘기사가 되기에 사이즈가 작다’ 예상은 했다. 그래도 의문은 남았다. 법조계에는 양형 기준이 있고, 재계에는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분식(粉飾) 기준이 있다. 언론계에는? 기사를 결정하는 위법 행위의 적정 금액이 있나?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당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게 뻔하다. 그렇다고 위법 정황을 지나치는 것도 언론 입장에서 정당한 일은 아닐 것이

다. ‘구찌’를 인터넷에 검색해 봤다. 일본어로 ‘입(口·くち)’이라는 견해도, 재화를 뜻하는 ‘굿즈(goods·グッズ)’라는 얘기도 있었다. 종합하면 ‘금전적 규모’ 정도로 이해가 됐다. 기사를 쓰려면 ‘구찌’가 대체 얼마나 돼야 할까?

2022년 10월.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곳의 총수인 A회장에 관한 비리를 제보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A회장의 부적절한 처사에 관해 쓴 기사를 보고 연락이 온 듯했다. 제보자를 만났다. 요지는 간단했다. A회장이 자택에 회사차를 두고 오랫동안 사적으로 이용하여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 제보는 꽤

구체적이었다. 회사차의 소재지를 입증할 현장 사진과 영상도 여럿 있었다.

문제는 구찌였다. 제보자도 무슨 말인지 안다는 눈치였다. 그래서 A회장이 취임하고 3년 반 동안 일부러 기다렸다고 한다. 회사차를 오래 사용할수록 배임으로 인정되는 액수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건넨 차량 계약 명세서와 통상의 리스료, 선수금, 보험료 등을 토대로 유지비를 계산해봤다. 약 1억원이었다.

속으로 탄식이 나왔다. ‘애매하다.’ 물론 1억원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너무 가파른 물가 상승률 때문이었을까. 딱히 눈길이 갈 만큼 대단한 액수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문제가 된 회사차의 가격보다 적은 금액이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한국 경제의 일맥을 틀어쥔 10대 그룹 총수였다. A회장의 연봉을 찾아봤다. 2022년 기준 28억9300만원. 1억원은 그가 단 2주일이면 벌 수 있는 돈이다. ‘고작 이 돈 아끼려고 회사차를 개인적으로 썼다고?’ 헛웃음마저 나왔다. 제보자가 앞에 있었다면 큰 실례를 저지를 뻔했다.

일단 취재는 진행했다. 세 차례 A회장 자택을 찾아 차량의 동선과 사적 이용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제 결정을 해야 했다. 당장 객관적 판단은 불가능했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했다. 회사도 후폭풍을 감안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2022년 10월11일 서울 모처 A 회장 출근길에 찍은 사진. A 회장이 공식 관용차(‘98XX’)를 타고 내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듯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사는 취재한 대로 나갔다.

사실 ‘데스크 요청’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도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취재 과정에서 A회장 그룹 측은 “회사차를 자택에 두고 운용한 게 맞다”면서도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사기업이 임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회사차에 정부·공기업의 관용차 기준을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한 고위 임원은 통화에서 “나도 회사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도 청구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황당하다는 뉘앙스마저 느껴졌다. 살짝 욕하는 기분도 들었지만 얼굴에선 쓴웃음이 지어졌다. 전화하기 전에 고민을 거듭했는데, 전화를 끊으니 고민이 더 커졌다.



2023년 1월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가 A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사저널 최준필)

기사는 생각만큼 파장이 없었다. 대다수 언론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웬지 모를 초조함이 엄습해 왔다. 혹여나 기사가 우습게 비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들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나 싶었다. 하지만 회사와 나는 그 태풍을 직격으로 맞았다.

우선 회사가 A회장 그룹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억원의 광고비가 끊겼다. A회장은 회사와 함께 나를 직접 고소했다. 메일 함에는 조롱의 메일이 와 있었다. “대기업 총수가 사적으로 회사차 모는 게 뭐가 대수냐”는 것이었다. “연봉이 얼마데 고작 1억원 아끼려고 배임을 저질렀겠냐”며 기사의 저의를 따져 묻는 사람도 있었다. 마치 기사를 쓰기 전 내가 하던 고민거리만 쓱쓱 뽑아서 문장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

았다. 뗏목한데 뗏목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다. 기사를 인용해 A회장을 고발한 지역 시민단체는 거의 매주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어줬다. 그래도 찼찼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놈의 구찌가 문제였다.

비단 언론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정치권으로 눈을 돌리면, 부정행위 그 자체보다 액수로 인해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검찰은 2024년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문제의 식사비는 10만4000원. 일명 ‘10만원짜리 기소’로 불린 이 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헛웃음이 나왔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2024년 6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도마에 올랐다.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으로 6292만원을 썼다는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서다. 여권은 1인당 한 끼에 43만원꼴이라고 주장했고, 야권은 식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빼면 26만원이라고 맞섰다. 그 차이인 17만원은 정쟁의 골을 깊게 팠다. 결국 이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지며 법적 갈등으로 번졌다.

‘김건희 다올백’을 둘러싼 논란은 나라 전체를 흔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는 사실은 국론을 둘로 갈라놓았다. ‘부패 범죄’냐, ‘정치 공작’이냐를 두고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한 뒤에는 조롱의 장이 열렸다. 권익위 게시판에는 “영부인에게 300만원 엽선물 괜찮나요”, “다올백 대신 에르메스 백도 가능한가요”, “300만원 이내 에코백 보내면 대통령 기록물에 제 이름 올라가나요” 등 비아냥이 쏟아졌다. 디올도 문제고, 구찌도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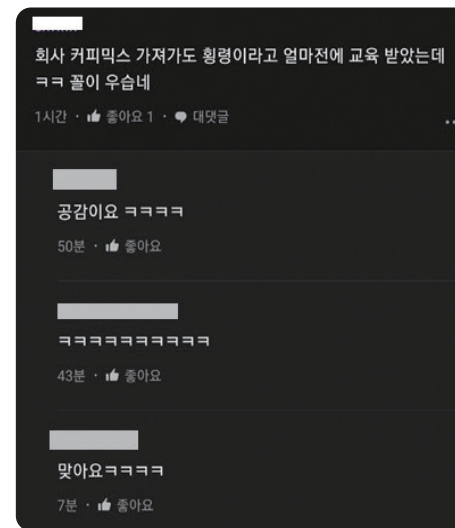
A회장 얘기로 돌아가면, 기사가 나온 뒤 A그룹 사내에서는 법무팀장 명의로 이메일이 돌았다. “회사차는 회장뿐만 아니라 고위 임원에게 모두 지급되고



2023년 1월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시민단체가 A회장 사퇴를 촉구하며 108배를 올리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있으며, 기업 총수의 회사차 이용에 사적인 용도는 없다”는 내용이었다. 취재 당시 들었던 해명과 정확히 결이 같았다. 해당 메일을 두고 직장인 익명 플랫폼 블라인드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 “회사 커피믹스 가져가도 횡령이라고 교육받았는데 꼴이 우습네” 기삿거리를 찾으려고 엿탐만 하던 블라인드에 처음으로 공감의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글을 달면 회사 이름이 공개된다는 걸 잠시 잊을 뻔했다.

한편 A회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경찰이 관계자들을 모두 조사하고 CCTV도 확보했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러나 진척이 없었다. 그렇게 두 번의 겨울이 지났다. 2024년 4월 말, A회장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이



2023년 9월22일 A회장의 회사차 유용 의혹과 관련해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블라인드 캡처)

알려졌다. 이로써 기사를 통해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입증해 줬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구찌에 대한 고민은 머릿속에서 잘 떠나지 않는다. 검찰 역시 A회장의 배임 액수가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했다고 한다. 사법당국도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검찰의 이번 판단을 두고도 뒷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경 씨의 10만원, 김정숙 여사의 17만원,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 그리고 A회장의 1억원. 당사자는 제각각이고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이를 모두 같은 잣대로 재단해야 할까. 아니면 사람과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봐야 할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18년 1월11일 서울 모처의 A회장 회사의 건물(© 시사저널 고성준)

이 2023년 6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발언한 내용 중 이런 말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에서는 30만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해도 구속됐고, 조합원에게 50만원을 쥐도 구속됐습니다. 이런 매표 행위에 대해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서도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최소 구찌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실마리를 제공한 것 같다. 🗳️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